

환경 저널

화보

● 原始의 自然을 찾아서 ③ 강원도 고성 물굽이 계곡

무섭게 복원되는 峽谷 생태계 (본문 296)

● 뉴스와 화제 '도시의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소나무 서귀포 바닷속의 神秘

● 현장고발 抱川郡의 총체적 환경파괴

● 녹색을 지키는 사람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李珍兒

본문

● 기획특집/국회의원이 고발하는 환경파괴
"대우조선, 거제도 해역 오염의 주역"
"202개 학교 오염된 지하수 학생에게 공급"
"낙동강 4급수로 전락"
"행정기관의 무지가 운문댐 오염 초래"
"검댕으로 만든 활성탄 정수장에 공급"

"대구의 대기오염 국내 최악"

● 환경칼럼
자전거는 21세기 도시의 상징

● 르포
농촌까지 파고드는
환경오염의 魔手

● 초점
北韓의 환경파괴 實狀

● 環境人의 肖像 ③
반핵운동가 金源植
계급성을 넘어 생명으로

● 세계의 이색환경보호단체를 찾아서
美 자원봉사비행사들의 모임 EAF

● 환경보호의 最前線에 선 기업 ③
선경
폐수제로작전에서 팜이제로까지

● 환경 리포트
넘비이론은 타당한가

자전거는 21세기 도시의 상징

전도로를 주차장하기에 이른 서울의 교통체증현상.
이로 인해 각종 산업의 물류 비용은 증가하여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자동차의 대안으로서 자전거 교통이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차량
공회로 5대

1대 400대

朴英淑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자전거 인구가 3억인 중국을 비롯
한 월남 등의 도심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자전거 홍수의 물결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며 우리는
그들 나라의 후진성을 진단하던 일이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면서 반면 서
구의 자전거 행렬은 하나의 건전한 취
미활동인 양 생각한 것이다. 서울 여
의도 광장에서의 자전거 타기나 시내
에서의 체력단련이나 체중조절을 위
한 발굴리기 운동에서 보듯이 자전거
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자전거가 가
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의 하나이
다. 그것도 21세기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전거가 주교통수단인 영국 케임
브리지에서의 생활에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했
던 것은 교통문제였다. 남녀노소가
모두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곳의 대중교통수단
은 불편하기가 말할 수 없었다. 자전
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이 병신취급을
받은 것은 물론이었다.

세계가 자동차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는 자전
거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현재 자동차 문제로 가장 심

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세계의 자동차의 80%가 몰려 있는 6개 국가에서다. 이들은 자동차 지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일본, 구서독,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들로써 새로운 교통정책을 모색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지난 6월 말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지탱가능한 도시문제를 주제로 '94지구환경' 회의가 열렸었다. 이 회의의 개최 장소인 그 도시의 의사당에는 각종 폐품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들로 온통 메워져 있었으며, 의사당 앞 광장에는 'CYCLE(순환)'이라는 주제의 자전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탱가능한 도시여야 하는 21세기 도시의 교통수단은 비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왕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자전거가 'CYCLE' 이라고 불리는 데는 바퀴가 돌아간다는 의미 이외의 오늘의 교통지옥 해결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어 의미심장함을 새삼스럽게 한다.

지구온난화, 자동차가 반의 책임

우리의 자동차 의존으로 대두된 문제들은 범위가 방대하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현상이다. 현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억대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마다 1천900만대를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700만 대이며 그중 서울에 200만 대가 몰려 있다.

서울의 정체현상은 하루 중 혼잡한 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게 하여 각종 산업의 물류비용을 연간 4조 9천 억원으로 증대시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도로를 주차장화하기에 이른 교통체증현상은 막대한 양의 연료를 길에 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은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 위기에서 주목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자동차가 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자동차 문제는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자동차가 경제성장을 비롯해 인간 생활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 인류에게 안겨준 문제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과연 자동차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편익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의 도심지에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도시행정 담당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의 묘책을 찾아야만 한다. 자동차의 경제성 향상, 배기가스 통제장치, 새로운 자동차 개발 등의 기술개발 촉진과 증가하는 차량의 소통을 위해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그리고 교통규제의 강화등이 현재 마련된 대책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발상의 대전환

이 요청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 세계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으로 유엔은 예측하고 있다. 교통문제는 도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쓰레기, 물문제 등과 함께 중요한 도시 사회문제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구의 교통정책, 특히 구라파의 지탱가능한 도시계획의 교통정책의 방향을 보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와 행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①도보자 ②자전거 이용자 ③대중교통수단 ④영업용 차량 ⑤쇼핑하는 차량 ⑥통근차량 순으로 되어 있다. 종전의 자동차 위주의 정책에서 인간위주 또는 비동력 교통수단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은 바로 그동안에 자동차에 빼앗겼던 인간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나라의 예를 들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지탱가능한 도시의 교통정책

△네덜란드의 구르넨겐

이 도시의 교통정책의 주요대책은 ①도시계획에 있어 주거지역과 직장, 그리고 여타 시설들 간의 거리를 단축하고 ②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위한 기간시설을 확충하며 ③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 도시의 1977년도의 도시순환계획을 보면 도시중



필자

심지를 4개로 분할하고 모든 차량의 진입은 자유롭게 하나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의 구역간의 소통은 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하고 있어 변화가를 벗어나는 지역에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 도시는 향후 10년간의 통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 정책의 중점은 도시와 지방 버스간의 그리고 철도와의 환승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이 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을 발전시키는 데는 버스, 전차, 지하철과 열차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표준승차권 제도와 철도의 택시제도였다고 한다.

이 정책의 평가에 의하면 생활의 질과 도심에서의 쇼핑 분위기가 향상되고 방문자수가 늘어났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 반면 자동차의 이용률이 47% 감소되고 노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도시 중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50% 이상의 자전거 통근율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은 5%, 도보는 15%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이 도시의 경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 소유율(200/1000)이 낮은 관계로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 자동차,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비율은 각각 1/3씩이며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이 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한 도시' 프로그램의 참가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보다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주민들은 도시행정의 우선순위로 교통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지역과 도심지의 자동차 교통을 통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도시는 50%의 자전거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도시에서도 자전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여부가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음도 말해준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이 도시에서는 1992년도 도심지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저조한 것이었지만 실시계획은 굳혀졌다. 1994~2000년 사이에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을 펴기로 했다. 그 계획의 목표는 2003년도에 예상치에 비해 31%, 그리고 1993년도에 비해 25%의 자동차 이용률을 감축하는 것이다. 시의 행정부는 도시의 주요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50%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5~30%의 감축은 큰 문제 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자동차 의존도가 낮은 동구의 도시에서의 자동차 이용 자체정책의 실현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가증될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서방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인이 선호하고 있는 자동차 이용률을 어떻게 감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유럽의 사례들에서 짚어 보았다. 문제는 자동차 억제정책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용이 교통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도에 실시한 도시교통문제에 대한 유럽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선출된 관리와 주민의 60%에 가까운 의견이 자동차 교통문제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표명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정책 집행자들이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호하는 나머지 자동차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환경에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의 실현성은 하려는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세 가지 교통수단 우선정책과 자동차 규제책, 그리고 단거리 통근 도시구조를 포함하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과 기업들도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보의 공유와 목적달성을 위한 운동이 정책수립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차 한대 줄이기 운동'(ONE LESS CAR)도 이것의 하나이다.

21세기를 향한 교통정책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보다더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위험마저 느껴야 하는 도시는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세계의 도시들이 사람을 위한 도시, 자동차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꿈꾸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시대착오적인 자동차 위주 집착의 교통정책과 주거지역을 도심지에서 내모는 토지이용정책에 대한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세계에 16개에 달하고 있는 인구 1천200만 이상인 대도시가 대중교통정책을 확대 실시하지 않을 경우 비참한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정책에 획기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만 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리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지역화와 지방자치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마도 도로확장이나 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되던 예산의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1995년6월 선거 이후 전면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가 전망을 밝게 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인 시도를 위해 대중교통 진흥정책에 입각한 방향설정과 대중교통 육성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이 자가용을 가지게 하고, 그것은 교통체증을 심화시켜 공해를 유발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교통지옥현상을 빚는다면 모든 차량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교통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

환경저널

화보

- 原始의 자연을 찾아서 ④

울릉도

해양과 고산 생태계의 調和 (본문 300)



- 昆蟲默示錄

비행술 뛰어난 益蟲 **잠자리**

- 현장고발

위생매립지에서 거대한 환경오염원으로 化하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본문 308)

- 환경초점

덕유산이 무너지고 있다 (본문 316)

- 녹색을 지키는 사람들

한국보통환경교육원 사무국장 **柳淨拈**

본문

- 환경칼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 기획특집/환경열풍의

虛實을 진단한다

정치권에 환경바람이 불고 있다
言論社의 그린경쟁은 장삿속인가
'그린'용어를 너무 남발한다

- 환경에세이

고결한 침묵으로 말하는 '자연'

- 현지보고

**'매연공장' 구 동독의
환경이 살아나고 있다**

- 環境人의 肖像 ④

배달독색연합 사무총장 **張元**
'에코토피아' 里長의 꿈

- 環境리포트

환경재해 예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朴英淑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최 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의 뜻을 새삼 흥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며 생활의 원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활인은 주방의 주인이

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일 수 있다.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말은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된 세력은 여성주부들이다. 주부 중에서도 전업 주부(1986년도 통계 676만 3천 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학교의 어머니회, 교회여성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역단위의 활동 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응분의 비용부담도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게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시민자치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이 민주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도 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혁이 필수적

우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물질만능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변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인이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에게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뒤따르기에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풍요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시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일이 옛 그제의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품문제, 대두아(大頭兒)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과 효소의 피해, 열대림의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프레온은 편리하고 값이 싸며 이것보다 우수한 화합물은 다시 없다고 해서 발명가는 노벨화학상감이었지만 이 프레온은 오늘날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혁없이 제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프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은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문명은 비누를 비롯해서 의복, 전기, 자동차의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등의 생활 필수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온은 바로 석유정제에 필요한 나프를 생산의 부산물인 염소의 처리물이다.

20년 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수법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해야 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①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정기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필자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 점검한다.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품인 경우 전기절약형인가, 공해식품은 아닌가,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 개의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은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적어도 하나의 환

경운동체에 가담하는 의무를 저야 한다.

②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 앞장선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지도를 우선 만드는 것이다. 공해배출업소나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망, 보안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휴식공간, 학교 주변환경, 하천 등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됐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작성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의 제28장에서는 각 지역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21세기 행동계획'(Local Agenda 21)을 1996년까지 시민과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해서 그 지역 환경의 변화를 비교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항심도 높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분위기를 복원해 낼 수도 있다.

③ 동시에 광역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문제, 하천수질문제, 산성우 문제, 녹지대 보전 광역쓰레기 매립문제 등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웃 지역과의 또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성취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제를 해낼 수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 수 있다.

④ 중앙 및 지방 행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의 조직 중에서는 환경분야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동강의 폐놀사건 등에서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그 수습에 바쁘게 돌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환경관련 법과 함께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중요의제로 그리고 그런라운드로 상징되는 국제경제의제로도 부상하게 되어 정부는 환경정책과 행정의 재정비를 서둘러야만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도 주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⑤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에게서는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 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 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환경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어느 단계까지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저항적이며 폭로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개발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봉쇄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민간 환경운동단체와 정부가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환경운동이 대안제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민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시각시정도 필수적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이나 주민운동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무공해식품 직거래운동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운동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밝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바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고 했다. 가정생활의 상징인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성주부들에 의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

환경저널

화보

● 原始의 自然을 찾아서 [2] /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

물한계곡

충북지역 생태계의 原形 (본문 290)

● 뉴스와 화제
大淸湖에 나타난 해파리

● 뉴스와 화제
강서구청의 '환경축제'

● 단기연재 / 태백산맥이 죽어가고 있다 [2]
시멘트공장은 허가받은
파괴꾼인가

● 녹색을 지키는 사람들
공업진흥청 품질환경인증과장 韓章燮
그린스카우트 공동위원장 崔昌燮
한국환경상용제조업협동조합장 鄭玄順

본문

● 기획특집 / 세계환경전쟁의 現主所
미국·환경감시기구로 변신하는 CIA
중국 '公害大國'으로 가는 급행열차

독일·주민 환경의식이 녹색당 앞지른다
일본·대기오염정책 세계에서 가장 엄격

● 환경칼럼
음식찌꺼기도 자원이다

● 평론
환경보호와 개발은 반비례하는가

● 환경민중의 현장 / 성남 운중동 대형주유소
설치 반대운동
과거의 앙금이 만들어낸 不協和音

● 집중고발
하수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 環境人의 肖像 [2]
서울대 金相鍾 교수
물위의 선비, 물밑의 파수꾼

● 환경보호의 最前線에 선 기업가
포항제철
철의 왕국 속의 환경낙원

● 환경리포트
세계화와 지역화의
환경패러독스

● 인터뷰 / 민자당 白南治 정책조정실장
"환경경찰제도 법안 상정한다"

음식찌꺼기도 자원이다

음식찌꺼기의 자원화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국의 모든 가정이 음식찌꺼기의 자원화운동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손쉽고 간편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이른바 EM방법이다.

朴英淑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구를 구하는 대변혁〉.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발간된 지 6개월 만에 2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의 제목이다. 이 책은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식량, 환경 그리고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는 'EM 기술'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오키나와 시의 류큐(琉球)대학의 농학부 교수로서 EM 기술보급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히가 데루오(比嘉照夫)박사이다. 히가 박사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자연농업위원회 위원장, 자연

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의 이사직 등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45개국에서 EM 기술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소생형 미생물의 집합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EM이란 '유용 미생물군'의 영어인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두문자를 딴 것이다.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자연계에는 소

생형의 미생물과 붕괴형의 미생물이 있는데 EM은 소생형의 미생물의 집합체라고 한다. EM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작물생산에 유효한 유산균, 효모균, 방선균, 광합성 세균 등 10속 80종 이상의 선별된 미생물군의 복합 배양된 액체를 지칭한다.

EM이 토양 속에서 증식하면 항상 화물질이 생기면서 흙속의 공기나 물을 정화하여 식물을 싱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생형 미생물의 분비물에는 아미노산이나 유기산, 다당류, 비타민 등의 동식물에게 영양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EM을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EM은 당초 농업용의 토지개량제로서 개발된 것인데 그 응용의 가능성은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적인 문제로 등장한 공해와 환경문제해결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EM을 농업에 적용시킨 경우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의 향상은 물론 병충해도 막을 수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축산의 악취완화, 수질정화, 유기폐기물의 퇴비화, 오염지대 정화 그리고 공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향상화제로서 응용되고 있다.

EM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화학물질, 방사선 물질,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성우, 탄

산가스 공해, 오존층의 파괴 등을 짧은 시간에 선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EM은 환경정화의 만능의 존재인 것이다. 현재 가장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를 'EM발효제'를 사용하여 퇴비로 만드는 일이다.

EM은 현재 아시아, 남미, 북미, 그리고 유럽지역을 비롯한 45개국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권의 태국과 남미권의 브라질이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M 기술보급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정보발신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에 EM농법이 소개된 것은 1986년으로서 자연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였다. 농업국인 태국에서는 농작물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EM기술을 지금은 축산, 과수, 조림, 수산, 폐기물처리와 오염처리 등에까지 확대 응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중국, 인도, 네팔 등의 20개국에 EM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89년에 EM기술이 소개되어 1991년 4월에는 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의 한국지부가 설립되었다.

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이 EM활동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이 나라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브라질의 농업은 전근대적인 화전농업에서 근대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브라질이 EM 농법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로서는 자연친화적인 낭비없는 자기완결형의 농업경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브라질은 EM 보급을 통해 공해, 빈곤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미래도시의 구상이기도 해서 눈길을 끈다.

지금은 EM 기술의 개발국인 일본에서도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에 일본에서의 그 활용이 부진했던 것은 일본의 공업우선, 농업경시의 정책하에서 농약과 비료회사, 농협 그리고 행정당국의 3자합일의 신기술에 대한 거부반응이 거세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의 EM활용 사례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자연농업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 연대를 위한 기구설립은 물론 1989년도에 태국에서, 1991년도에 브라질에서, 그리고 1993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회의도 개최한 바와 같이 EM 활용운동은 조직적으로 확대



필자

돼가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운영위원회가 금년에는 오는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차적인 시험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의 260개 시, 군, 구의 쓰레기 문제를 총지휘하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는 'EM발효제가 환경을 살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은 버려질 음식물찌꺼기에 EM 발효제(EM 보카시)를 뿌려 무공해 농산물을 위한 퇴비를 만들어서 응용하면 자원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천오염도 막는 일을 하는 것이다.

EM 발효제를 사용해 작물재배에

먼저 성공한 경기도 연천군에 이어 현재 EM농업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의 15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시험재배한 벼, 고추, 배추 등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작물보다 벼의 낱알은 많고 고추의 열매는 훨씬 크게 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산지를 개간하여 더덕을 재배하는 데 EM을 사용한 결과 그 성과는 5년간의 재배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과 알로에 재배에, 그리고 한국인삼 연초연구소에서는 인삼과 연초의 EM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또한 부산일보에 1993년 1월 23일자 기사에서 EM을 활용한 생활쓰레기 처리법을 보도한 바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 못지않게 쓰레기 처리에 EM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아파트 1단지의 240가구가 발효제를 활용해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일을 시작한 지 일년도 채 못 돼서 쓰레기의 양을 95%나 감량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곳 주민들이 분리수거처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 운동을 쉽게 정착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없다는 것과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처리해야 했던 수고가 덜어진 데 있다. 그리고 만들어진 퇴비는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여지며 시 행정당국으로서는 쓰레기 수거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비용절약이 돼서 반기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민과 관이 합심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1993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5천258만 t으로 생활폐기물은 그 중 43.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17.5%)을 제외한 일반폐기물(82.5%)의 관리를 위한 수집, 운반, 처리비와 매립, 소각시설의 설치비 등에 투입된 1993년 예산은 8천800억원이다.

생활쓰레기의 31%나 되는 음식찌꺼기는 오수 및 악취로 취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립처리할 경우 침출수의 주원인으로 지하수 오염과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유발한다. 또한 높은 수분함량은 소각시 소각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며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유독가스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음식물 찌꺼기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면 양질의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원료값으로 환산해서 연간 8조원으로 계산되는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는데에서 그만큼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정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자에 대한 음식쓰레기 감량

화 시설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환경친화적 방법의 중요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1일 평균 3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일부터, 1일 평균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66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이 1994년도에는 160개소이며 1996년도에는 313개소이다. 이 규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은 일당 약 141t으로 추정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0.71%에 해당된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이 규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994년 실시로 47억 4천만원, 1995년 확대 실시로 79억 1천만원의 순 편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상업체의 경우 설비인용연수인 7년간의 업소당 1994년도에는 2천600만원, 1995년도에는 1천800만원 정도의 순 손실을 봐야 한다. 이 분석에 의하면 업체의 손실 만큼이 지방자치단체의 편익이 된 셈이다. 음식찌꺼기의 감량의 효

과는 불과 0.71%에 지나지 않는 이 규제실시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재조정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 설비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한 검토, 생산된 퇴비의 수거운반처리 체제 수립, 퇴비의 품질기준 및 중금속 허용농도 제정 등의 미흡한 점도 보완돼야 한다.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지대정화사업(Super Fund Project)에서의 쟁점도 바로 기술선택에 있다.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유기폐기물 처리에 발효제(미생물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금번 규제에도 발효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어떤 발효제와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느냐이며 그것이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음식찌꺼기의 자원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량배출업소에 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국의 모든 가정이 음식찌꺼기의 자원화운동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은 적게 손쉽게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음식찌꺼기는 자원과 독극물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찌꺼기의 얼굴이 결정된다는 데 우리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

환경 저널

화보

- 原始의 자연을 찾아서 □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진동계곡

한국 最大・最後의 原始林(본문 292)

- 뉴스와 화제/畫報로 보는 '94 환경산업전

- 뉴스와 화제/서울 도심에 나타난

황소개구리

- 단기연재/태백산맥이 죽어가고 있다 □

靈山 太白山의 '골병'(본문 296)

- 녹색을 지키는 사람들

국방부 환경담당장교

환경시인

주부환경운동가

梁任錫

洪申善

文善景



본문

- 환경칼럼

朴英淵

녹색도시운동을 전개하자

- 기획특집/환경산업, 이대로 좋은가

朴元勳

한국 환경사업의 現住所와 未來

그린 테크놀러지를 위하여

李孝

환경영향평가는

金台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李延欽

'그린상품'의 虛實

- 집중고발

劉容和

'공기지옥'의 현장, 지하철

- 環境人의 肖像 ①

徐海誠 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관자' 타고난 '公害亂世'의 일꾼

- 환경보호의 最前線에 선 기업 ①

金榮基

두산그룹 '오염의 주범'에서
환경모범기업으로

- 환경과 건강

프레드 상어

'오존층 파괴 有害論'은杞憂

- 환경리포트

具滋仁

生態都市學이 떠오르고 있다

- 환경용어

체계이론적 사고

summary 94/9

환경칼럼

녹색도시운동을 전개하자

지금 세계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한창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벌어지는 녹색도시운동.
우리에게도 95년 6월에 실현예정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이 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朴英淑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의 110여 개국의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선언문'과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 21'이라는 행동계획을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에서 28일까지 영국의 산업도시 맨체스터에서 '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주제하에 개최되었던 '94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4)'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50개 도시로부터 600여 명

의 지방정부, 의회,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의제 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유엔의 '지탱가능한 발전 위원회(CSD)'가 마련하는 첫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의 도시정책에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도시 빈민, 취업과 생계, 정부의 기능과 시민과의 민주적 협력관계, 도시환경과

건강, 자원과 토지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그리고 교통과 통신문제 등이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크고작은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다른 점이 있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대표들과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것이며 지역에서 실행가능한, 그리고 시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시민 차원에서 논의한 회의였다는 데 있다. 이 회의에서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토의결과는 유엔 기구에 제출되어 녹색도시를 위한 국제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나라 도시가 이번 회의의 참가도시로 선정된 50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일이다.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우리 나라도 합의에 서명한 바 있는 의제21의 제28장에서는 참가국들로 하여금 오는 96년까지 국가별 그리고 지방정부별의 의제21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여유는 1년여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궁급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그들의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세계의 녹색도시운동은 시작된 것이다. 녹색도시운동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95년 6월에 실현 예정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나 이 작업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구의 지탱 가능한 발전

리우의 지구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인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지구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관계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40장으로 이루어진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물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원 소비 감축△폐기물 배출 감축△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공해 감축 및 방지△오염지대 정화△환경훼손 방지△에너지 관리△환경 우호적인 교통수단△산림과 종의 다양성 보존△차별과 빈곤 타파△각 사회 집단의 세력화△인간의 기본인권으로서의 주택문제를 비롯한 생활요건 확보△균등한 교육기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의제21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제21의 3분의 2의 행동계획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실현가능하지 않

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탱가능한개발위원회'를 구성, 각 국가들의 의제 21의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의 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의 2년간 그리고 1996~2000년까지의 5년계획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시들이 리우회의 직후부터 '지방 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세계에는 또한 이러한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도시 연맹'같은 기구들도 조직되어 세계의 도시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쌍방간의 협력관계인 자매결연이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엔과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이 앞으로도 계속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가 96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의 회기를 이스탄불에서 '유엔 정주권 제2차 회의(UN Habitat II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도시 정상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



필자

전계획의 우선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을 필두로 도시관리 문제와 주택개발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촉진시키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기간시설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기회제공을 도모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성 있으며 지탱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이 도시화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게 되며 나머지 50%의 인구들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도시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며 환경파괴와 사회적 혼란, 실업률의 상승, 그리고 주택문제

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 등의 도시화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구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세계 곳곳의 녹색도시운동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다자간의 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도 25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서명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도 지구환경 보존에의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도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중앙정부가 '한국 의제 21'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들도 '지방 의제 21'을 각각의 지방 사정과 특성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아직 지방의제 21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지방정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오늘날의 국경없는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자치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환경정책에서 양극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

도 있다.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발휘로 환경이 보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환경단체들이 몇 지역에서나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가와자키 시의 경우를 보면 이 도시는 21세기를 향한 녹색도시 만들기의 슬로건으로서 '가와자키 신시대'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그들의 활동이념은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복지도시, 세계에 개방된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시민자치를 존중하는 도시,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는 힘이 넘치는 도시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이 도시는 '가와자키 신시대 2010 계획'이라고 명명된 녹색도시의 종합계획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생태 감시 25(Eco Check 25)'라는 생태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도시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민들이 전개하는 '지탱가능한 시애틀의 지표'라는 활동이 돋보인다. 이것은 환경, 인공과 자원, 경제, 그리고 문화와 사회 문제에 걸친 40개 항목(1993년도 20개)의 시애틀의 지표를 앞으로 계속 해마다 조사·분석·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작업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94 지구환경회의'에서 이들의 활동은 높이 평가받은 바 있었다. 이들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몇 가지 지표는 향상된 것에 반해 보다 많은 지표에서 악화일로에 현상에 직면하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을 지탱가능한 도시, 녹색도시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4 지구환경회의'가 열린 맨체스터 시의 경우 리우회의 이전부터 녹색 도시 건설을 위해 '녹색 팀(Green Team)'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급세기 초의 산업혁명의 심장부였으며 일찍부터 도시화가 되어 환경과피현상의 전시장이기도 한 맨체스터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맨체스터 의회는 녹색 팀으로 하여금 '맨체스터 의제 21'의 작업을 하도록 해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지금은 그의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세계의 어느 도시나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회의참가 도시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발국가의 도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도 이 과제에 있는 힘을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는 민간단체들의 압력 정도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각급 정부로 하여금 해당 의제 21을 만들도록 하는 것도 최근 크게 성장한 민간 환경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다.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함께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녹색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의제 21'을 수립하라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 지면 질수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대책은 강경해질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국제회의도 빈번해 지고 규제 또한 엄격해 질 것이다. 세계의 도시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대책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UR에서나 GR에서 우리 나라의 뒤쳐진 대처로 인해 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행동계획 설정에 능장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